

## 제193호 (2009. 2. 9)

---

■ 경제 동향 : “SOC 예산 선집행 불구, 건설업 체감경기 침체 여전”

■ 특집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요약

-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 건설업 발주방식 선진화 방안
- 건설업종업역 및 생산 체계 선진화 방안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방안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연구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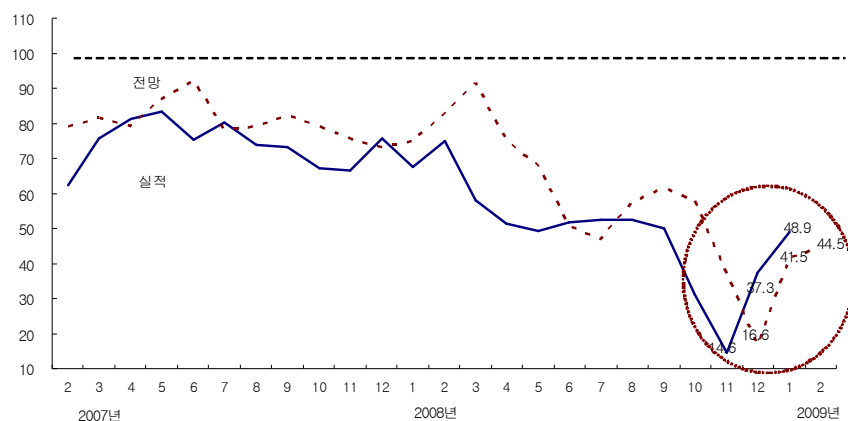
■ 건설 논단 :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 “SOC 예산 선집행 불구, 건설업 체감경기 침체 여전”

- 1월 CBSI 전월 대비 11.6p 증가해 2개월 연속 상승, 지수는 48.9에 불과 -

- 2008년 10월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갱신했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침체 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에 미치지 못해 체감경기 침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CBSI 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심화로 작년 10월 이후 2개월 동안 단기간 사상 최대 낙폭인 35.5p나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갱신하며 11월에는 14.6을 기록했음.
- 그러나, 지난 12월 지수가 전월대비 22.7p 증가한 데 이어 1월에도 전월대비 11.6p 증가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가 48.9를 기록,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개선됨.
- 이는 지난 12월과 마찬가지로 주택경기가 이미 최악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고, SOC 예산 증액 및 선집행 효과가 중소규모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 급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2개월 연속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50선에 못 미쳐 체감경기 침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2월 지수 전망치도 44.5에 불과해 현재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2월에는 대형업체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으나, 1월에는 중소기업체지수 상승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 10월 이후 2개월 동안 59.0p나 하락하여 업체 규모별로 가장 낮은 수치(7.7)를 기록했던 대형업체지수는 지난 12월에 38.5p 상승하여 지수 반등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 1월에도 7.7p 상승했지만 지수는 53.8에 불과해 아직 체감경기 침체는 여전함.
  - 이미 오래 전부터 침체가 심각해 작년 9월 이후 하락폭(18.4p 하락)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중소기업체지수는 12월 9.1p 상승에 이어 1월에는 21.2p 상승한 50.0을 기록해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는 SOC 예산 선집행 효과가 소규모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로 판단됨.
  - 한편, 중견업체지수는 지난해 12월 18.5p 상승에 이어 올 1월에도 7.1p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상승폭이 적어 지수가 가장 낮은 42.9에 머무르며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공사물량지수는 연말 발주물량 증가로 지수가 다소 양호했던 지난 12월보다 다시 8.1p 하락한 54.5를 기록했으며, 공종별로는 SOC 예산 선집행 효과로 토목물량지수가 가장 양호한 가운데, 주택물량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감.
  - 토목물량지수는 연말 공공발주 증가에 따라 82.5(전월비 36.2p 상승)를 기록한 12월에 비해서는 6.0p 하락한 76.5를 기록했으나, 타 공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체의 토목물량지수가 전월비 15.4, 16.6 상승한 80.8, 71.2를 기록해 SOC 예산 선집행 효과가 우선 중소규모 토목공사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
  - 반면, 주택물량지수는 전월대비 6.7p 하락한 24.6을 기록하여 작년 11월(28.3)의 사상 최저치를 재갱신하면서 최악 상황을 이어감.
  - 비주택물량지수 역시 최근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2.3p 하락한 37.6을 기록해 물량 침체 수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한편, 공사 물량 축소로 인력 및 자재부문의 수급과 비용 지수가 기준선인 100 내외의 수치를 기록해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금조달 및 공사 대금수금지수는 67.9, 74.3에 불과해 자금관련 상황이 계속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 ‘건설산업의 국민신뢰 회복과 글로벌가치 창조를 위한 선진화’ 추구 -

### ■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수립의 배경

- 내수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한국 건설산업이 재도약이 불가능 상황에 직면
  - 국민경제 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고비용·저효율 현상 심화
  - ‘부정·부패·부실’이라는 국민적 인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평가임.
  - 국민들의 동의 없는 신규 건설투자사업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 내수시장 고갈에 대비해 대체 시장발굴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절실
- 한국 건설산업의 잠재력을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산업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음.
- 국토해양부는 2008년 5월 민간인이 중심이 된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건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출범시켜 2009년 1월까지 선진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음.

### ■ 비전과 목표 설정

- 선진화위원회는 선진화 비전 2020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가치 창조산업’을 선택했음.
-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대 목표를 설정하였음.
  - 설계기준의 글로벌화 및 생산성 혁신으로 등으로 총사업비 30% 저감
  -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해외건설 수주액 2,000억 달러 달성
  - 투명성 세계 10위권 진입

〈특집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요약〉 편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2009년 1월 22일 개최한 공개토론회 자료인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종합보고서(안)」의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 ■ 선진화 비전과 목표 수립의 기본 철학

- 한국적인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 건설산업의 법과 제도 및 수급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경쟁력을 발굴 및 확대
- 글로벌 스탠더드는 특정 국가의 법·제도가 아닌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함.
  -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과 충분히 호환이 가능한 개방성 추구
  - 기술과 가격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발주시스템 구축
  - 정부의 법·제도보다 시장 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효율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추구

## ■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핵심 전략 선택

- 분권·책임·성과에 기초한 공공발주시스템 혁신
  - 발주자의 재량권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보장
-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설계기준의 글로벌화 및 품질·성능 중심의 발주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 지원 및 협력관계 혁신
  - 주계약자형공동도급 확대 등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계약방식 개선
- 투명성 제고와 부패 척결
  - 업 등록에 대한 제재보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3진 아웃제' 도입
- 지식·정보중심의 세계일류산업으로의 도약 기반 조성
  - 가칭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를 1/10로 축소 지향

## ■ 향후 계획

- 2009년 2월 중으로 '국가경쟁력위원회'에 협의 및 보고, 대통령까지 보고 후 선진화 실행계획을 확정시킴.
- 2009년 6월까지 재정기획부와 발주제도 관련 개선 내용 협의 및 확정 후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 목표
- 2009년 7월부터 국토부 산하 5대 공기업이 시범사업을 선정 및 시범 적용 예정
-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과 효율성 검증 후 단계별로 적용 범위를 확산시킬 계획임.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

## 건설업 발주방식 선진화 방안

### ■ 선진화의 기본 방향

- 발주자 역량강화 및 발주제도의 글로벌화
  - 발주자 역량 강화를 통해 공급자인 건설기업들에게 생산성 제고를 요구하던 ‘압박(push) 방식’에서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유인(pull) 방식’으로 전환
  - 국내 공공공사에만 적용 가능한 발주제도를 글로벌시장과의 호환성 확보를 전제로 수준을 향상시킴.
- 발주자의 재량권·책임성 강화 및 선택권 다양화
  - 발주자에게 발주, 입·낙찰, 계약방식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택 가능 방식을 다양화시킴으로써 발주자 재량권에 제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 선진화 방안의 선택

- 발주제도의 범위 선택
  - 발주, 입찰, 낙찰 및 계약방식을 포함하고, 사업건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도 발주방식 선진화 전제 조건에 명시함.
- 발주자의 재량권 강화 및 발주방식 다양화
  - 일정 규모이상 사업에 대한 조달청 위임발주 의무 규정은 임의조항으로 전환함.
  - 전기·통신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규정 및 동일공사 분할발주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에 일임함.
  - 학교나 공공청사와 같이 표준설계에 가까운 구조물 공사에 시공책임사업관리방식(CM at Risk)을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평가하도록 권장함.
  -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복합사업에 발주자 기능과 역할 대행을 위한 종합사업관리방식(Program Management, PM)을 도입함.
- 기술경쟁촉진을 위한 입찰방식 다양화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부터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해 기술력을 발휘하도록 입찰방식을 개선함.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한 후 점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토록 함.
- 도로 노선 확장사업이나 시내 교통체계 개선과 같이 조기 준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기단축을 주요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A+B' 입찰방식도 시범 도입함.
- 발주기관 내 설계시공일괄심의 전담 부서 운영
  - 현재 평가위원 풀(pool)제로 운영되던 설계시공일괄심의 역량을 갖춘 발주기관부터 심의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자체 심의하도록 하고, 이후 점차 범위를 늘림.
  - 또한, 발주기관 내 자체 심의 전담부서에서 발주방식은 물론 저가심의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외부의 소수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PQ의 변별력 강화
  - 업등록 실적 중심에서 동일공사 실적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PQ의 변별력은 사업책임자 및 특수부문 기술책임자의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입찰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변별력 강화
  - 사업평가제 정착시 성과평가 결과를 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함.
- 계약방식 다양화 및 선진화
  - 선 착공 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산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설계변경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공기 내 준공을 위해 확정고정금액계약방식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계속비계약방식을 의무화해 신규 공사부터는 장기계속계약방식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택되도록 유도함.
- 최저가낙찰방식 선진화
  - 공종별 단가 중심 평가에서 공법 중심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과 가격 종합평가방식제를 도입하며, 최고가치낙찰방식에 대해 성과 평가 후 확대토록 함.

## ■ 선진화 방안 적용 전략

- 발주제도 시스템 구축 후 도입 및 사전 예고제 도입
  - 「선 제도 구축, 후 적용」 원칙에, 역량이 갖춰진 발주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함.
  - 신규 도입 제도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검증 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사전 예고제를 통해 발주기관 및 건설기업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전략임.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

## 건설업종업역 및 생산 체계 선진화 방안

### ■ 건설업종·업역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기본 방향

- 건설업종·업역 구조 및 생산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음.
  -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경직되게 운영
  - 상하관계에 기초한 하도급 및 중층 구조로 인한 의사소통 취약
  - 건설업종별 면허 및 등록제도, 그리고 사업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해 업종간 업역분쟁과 진입장벽을 유지
  - 여러 건설업종이 다른 법률과 다른 소관부처에 의해 관리돼 건설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 업종/업역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위원회가 제시한 5대 전략을 달성하는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제시되었음.

### ■ 5대 전략에 속한 건설업종·업역구조 추진 과제

- 제1전략 : 분권·책임·성과에 기초한 공공발주시스템 혁신
  - 분리발주 및 분할계약 금지조항 폐지 :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선택권과 자율권 확립을 위해 관련 조항의 폐지안을 제안
- 제2전략 :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다원화된 건설 엔지니어링이 업무 관리체계 일원화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육부 등으로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는 현 법령체계에 대한 일원화 제안
- 제3전략 : 대·중소기업의 지원과 협력관계 혁신
  - 표준합의계약서(Consensus Contract Documents) 시스템 도입: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상기 계약서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발 및 보급하여 원/하도급간 협력 시너지 효과를 도모
- 제5전략 : 지식·정보중심 세계일류산업으로 도약기반 조성
  -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철폐와 경쟁 촉진
    - 등록기준의 단계적 완화 내지 폐지
    - 종합/전문건설업종 체계 개편
    - 건축설계·시공 겸업 단계적 허용 검토



## ■ 핵심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 건설 업종업역 및 생산체계의 과제 가운데 국내 건설생산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과제는 제5전략에서 제시한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철폐와 경쟁 촉진 과제가 되겠음. 이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등록기준의 단계적 완화 내지 폐지
  - 현행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sup>1)</sup>의 경우 선진국의 기준을 정형화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과중함. 반면에 등록기준 완화는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부추길 가능성도 상존함.
  - 유럽이나 미국은 건설업면허제도와 같은 시장진입규제가 없어도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그 이유는 건설보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부실 건설업체 배제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운용 또한 엄격하기 때문임.
  - 궁극적으로 국내의 발주 및 입/낙찰제도, 건설보증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이 이뤄진다면, 그 시점에서 등록기준의 대폭 완화 내지 폐지를 추진
- 종합/전문건설업종의 개편
  - 유럽은 건설업등록제도가 없고, 미국의 일부 주나 일본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제도가 있으나, 국내와 같은 종합/전문건설업 구분은 없는 실정임.
  - 현행 등록기준을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자유로운 기업활동 영역의 보장과 공정한 경쟁 등 시장기능에 의한 유연한 협업체계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종합/전문으로 이원화된 건설업 등록구조를 단일의 건설업으로 통폐합 하면서 업종업역의 조정이 필요. 하지만 이의 문제는 사업자 단체의 존립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함.
- 건축 설계·시공 겸업 단계적 허용 검토
  - 기본적으로 설계·시공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건설 생산성 향상과 품질제고를 위해 겸업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기로 함.
  - 건축설계·시공의 겸업은 설계·엔지니어링 및 시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EC(Engineering&Construction) 기업의 탄생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 창고나 공장 같이 특별한 창의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건축물부터 설계·시공 겸업을 단계적으로 허용

최석인(연구위원·sichoi@cerik.re.kr)

1) 현행 종합건설업의 경우 자본금 5~12억, 기술자 5~12인 등으로 전문건설업은 자본금 2~10억, 기술 및 기능인 2~5인 등으로 구성됨.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방안

### ■ 문제 인식

- 정부는 국가 재정의 24%나 되는 막대한 예산(42조원, 2007년)이 투자되는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해 공공건설사업효율화 대책(1998년),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2008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비용과 공기 측면에서 선진 외국과 격차가 존재하는 등 공공사업 성과 부실로 인한 국고낭비가 심각한 실정
- 공공건설사업 비효율성의 원인은 발주자의 역량 부족과 예산 및 사업관리 절차의 비효율, 미흡한 성과관리와 깊은 관련이 있음.
  - 공공발주자의 역량 및 재량권 부족, 절차위주의 감사 등의 이유로 사전적 계획·조치보다 사후적 확인·검토 업무에 치중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관리의 전문성 미흡
  - 재정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신규사업추진과 사업기획단계의 체계적인 검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로 막대한 사회비용 초래
  - 국내 공공사업의 관리는 산출물이나 사업 결과보다는 투입을 중심으로 한 절차와 규칙에 치중하여 목표 관리에 의한 성과관리 체계 미흡

### ■ 주요 개선방안

-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공공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제고
  - 공공건설사업의 프로세스 단계별 공공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단계별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수행능력 등의 역량을 구체화한 발주자 역량평가모델 개발
  - 공공발주자의 사업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발주자 내부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그에 따른 미흡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함.
  - 발주자교육센터를 통한 공공건설 사업관리 필수 공통사항 공동교육,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에 의한 발주자별 취약점 집중 교육 실시, 사업책임자 인증 프로그램 도입, 발주자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한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강화

- 해당 사업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각종 발주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선진화 방안의 시범 추진을 위해 공공발주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전과정을 일관되게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관리총괄 책임제도 도입
- 법에 의한 획일적 적용보다는 국내 다양한 공공발주기관의 유형, 건설사업의 특성,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고려한 사업관리 방식 선정 기반 조성
-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 단계별 점검제도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시킬 만큼 선행단계의 필요한 관리요건들이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와 사전 계획 및 준비여부 점검 강화
  - 위험관리, 생애주기 비용 분석이 사업 전(全)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점검 제도를 통한 발주자의 위험 관리 강화
  - 사업 구상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을 정의하고, 핵심 성공요인의 측정 방법을 규명한 후 단계별 성과평가를 강화함으로써 단계별 점검제도를 통한 성과 관리 강화
- 공공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수행 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
  - 공공건설사업 프로세스 단계별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측정하여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진척률 및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사업 수행성과의 객관적 파악 및 성과향상을 도모
  -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검토시 유사동종 사업의 사후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성과평가에 의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사유형별, 시행과정별로 표준 소요기간 및 비용을 산출·고시하여, 유사 신규사업 계획의 충실화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 국민세금에 대한 예산집행자의 책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국민 세금에 대한 가치 증대,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사업성과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장철기(연구위원-ckchang@cerik.re.kr)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및 추진 과제

- 시공부문에 비해 설계·엔지니어링 등 소프트한 부분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ENR지가 발표한 2007년 세계 200대 설계업체의 매출액에서 우리나라 설계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
  - 선진국의 건설기술력과 비교하면, 시공기술력 분야는 선진국 대비 81% 수준이나,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75% 수준에 불과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경쟁력 확보’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 중 하나이고,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추진 과제를 선정
  - 글로벌 설계·엔지니어링 기업 육성
  - 최고가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도입
  - 다원화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관리체계 일원화

### ■ 글로벌 설계·엔지니어링 기업 육성

- ENR지가 발표한 2007년 세계 200대 설계업체 중 100위 안에 든 우리나라 설계업체는 1개 업체일 뿐만 아니라 10위권 설계업체 매출액의 5~10% 수준에 불과함.
  - 투자개발형·턴키발주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해외시장에서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 국내 설계업체를 세계적 수준의 종합 설계·엔지니어링업체로 육성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함.

- 세계적인 종합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육성과 전문화
- 설계·엔지니어링 용역 PQ 등 발주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설계·엔지니어링 기준과 성과품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중소 전문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육성

## ■ 디자인 거버넌스 도입

-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관리를 단순 행정절차에 의해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최고가치를 지닌 예술성 있는 건축물이나 공간환경 조성이 어려움.
  - 영국·네덜란드·프랑스 등 선진국은 프로젝트 기획 초기단계부터 최종 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 디자인 거버넌스를 도입·운영
- 최고가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 전체 단계에서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디자인 수행체계(디자인 거버넌스)를 도입·운영함.
  - 전문가와 관련 주체 간 협의와 네트워크에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디자인의 통합적 질 향상을 성취하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 중심의 디자인관리 시스템 구축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관리체계 일원화

- 다원화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현행 관리체계를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건설기술 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담당업무는 건설기술용역 관리(국토해양부), 엔지니어링 관리 및 진흥(지식경제부) 업무, 기술사(교육과학부) 등으로 관리주체가 다원화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

##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 4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양시 관광문화단지사업단 전문가 간담회 참석</li> <li>한류우드사업의 민간공모사업 부진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li> </ul>
2 5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도시정책연구소 주최 '미래도시포럼' 참여</li> <li>경기도의 신도시 시장의 전망 및 정책 방향 토론</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연구원 주최 자문회의 참여</li> <li>'문화예술인공제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자문회의에 참여하여 건설공제제도 설명</li> </ul>

## ■ 대정부 정책 건의 활동

- 조선일보 주최 '홈텍스 2008' 세미나 주제 발표 참여
  - 2.3(화) 코엑스 전시장 세미나홀에서 개최된 조선일보 주최 '홈텍스 2008'의 세미나에서 '하이그린 홈 활성화 정책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발표
- 오마이건설신문 주최 기획좌담회 참여
  - 2.6(금) 오마이건설신문이 주최한 '공공공사 조기발주 점검' 기획좌담회에 사회자로 참여

## ■ 기타 연구원 활동

-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지역 순회 세미나 개최 예정
  - 연구원은 오는 3.3(화)부터 영남(부산, 대구), 호남(광주), 충청(청주) 등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지역순회 세미나 개최 예정
  - 지역별 개최 일정

지역	장소	일자(예정)	공동주최기관
부산지역	부산	2009. 3. 3(화)	부산발전연구원
충북지역	청주	2009. 3.10(화)	충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지역	대구	2009. 3.17(화)	대구경북발전연구원
광주전남지역	광주	2009. 3.25(수)	전남발전연구원

- 'BTL사업 추진 실무과정' 개최
  - 일정 및 장소 : 2.17(화)~2.20(금), 총 4일간 32시간,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국내 건설산업의 국민경제 비중이 25%를 넘어설 때도 있었다. 밖으로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미국에 이어 2위에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 풍부한 내수시장에서 물량을 어렵지 않게 확보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봉사하는 역할로 비춰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줄어들었고 공급 업체들과 기술인들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저하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판단이 선진화 전략의 수립 배경이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을 지배하는 ‘게임의 법칙’이 이미 바뀌어버렸다. 오직 주먹으로만 승부를 걸었던 복싱이 이제는 이종격투기로 변질되었다.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 반칙이지만 이종격투기도 엄연한 국제 경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글로벌 건설산업의 경쟁 환경도 전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의 법·제도의 근간인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인정하면서도 속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牛步千里’란 말처럼 소처럼 느린 걸음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구촌을 상대로 한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빨리 움직인다. 글로벌 무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질 시간적 여력이 없다.

국내 모든 기업과 건설인들이 동참하는 산업 환경 구축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효율성과 경쟁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추구하고 있는 과제다. 어린 시절 ‘앞서가는 놈은 도둑 놈’이라는 끌어내리기 식이나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식으로는 한국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변화는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흑백’이 아닌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살리는’ 국가와 산업 차원의 눈높이에서 선택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 대책과 달리 발주자와 발주시스템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 체계의 효율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차별적인 접근방식을 선택했다.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

- 문의 : 기획조정실 교육팀(Tel.3441-0691, 3441-0671, 3441-0848)